

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초 록 〉

최근 국제정세는 냉전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영을 구분하는 요소로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갈등은 단순히 이념과 가치에만 기반을 두기 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본 연구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식공공외교와 정책공공외교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조하는 등 발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정책공공외교의 일부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은 최근 국제정치의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보편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핵심어: 냉전,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정책공공외교, 글로벌 보편 가치

* 이 글은 한국PR학회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eshan@sungshin.ac.kr

1. 서론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면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이른바 ‘신냉전’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적 상황으로 인식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주장도 상당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이 결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와 유사한 양극 진영대결의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는 어떠한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 글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현재 우리의 공공외교 정책의 지향점들을 검토해보고 공공외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외교를 통한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와 국익 실현을 위한 노력은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과 2017년 8월에 수립된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을 반영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이미지 강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업체계 정착이라는 4개 목표 하에,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 매력 확산,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의 6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외교부 2017, 11).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등을 배경으로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2년 8월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이 확정·발표되었다.¹⁾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주요국간의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안보 불안정성 심화와 글로벌 공동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과 대립 심화를 공공외교 환경의 주요 변화로 꼽고 있다(외교부 2022, 6). 즉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정책 방향과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2017.1.~2021.1.) 시기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의 심화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국제적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배경으로 수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냉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공공외교 정책(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글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즉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일본, 유럽과 반(反) 자유주의, 반 서구적 가치를 내세우는 중국, 러

1) 외교부.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2023~2027]』 (2022. 8. 24.)

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가치 대립(가치의 진영화)을 배경으로(김태환 2019),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그 내용 중 하나인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국제정세의 변화와 신냉전 시대의 도래

1) 미중 갈등과 진영 갈등의 심화

탈냉전과 함께 중국은 국제경제와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성취한 200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주목받기는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0년대 초반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오바마(Obama) 정부는 2011년에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제시하며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을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로 추진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전개되는 가운데 중국은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신형 대국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공세적인 외교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중 관계는 점차 협력보다는 갈등관계로 변화했으며 특히 2017년 트럼프(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 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바이든(Biden)이 당선되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집권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만큼은 기존 정책들을 계승했고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경쟁 구도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대결적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미중 양국의 충돌은 무역에서 첨단기술 분야로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로 확장되었다(류동원 2022, 334). 이처럼 경제 분야의 갈등이 가치와 규범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위계구조와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위계구조에 중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어려운 과제로 주어졌다(오승희·박창건 2020, 33-34).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국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강조했는데 미중갈등은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처럼 진영화(陣營化)하는 모습을 띄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구 주요 국가들과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으로, 다수의 중견국과 개도국들이 이러한 진영화에 모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다층적·복합적 경쟁으로서의 신냉전

현재의 미중갈등 또는 진영 간 대립 상황은 ‘규범 및 질서 경쟁’과 ‘정체성 경쟁’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류동원 2022, 334). 즉 미중간의 안보와 경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진영이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미국은 특히 ‘가치동맹’을 내걸고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국가들 간의 다자협력체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김태호 2021, 117). 이러한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신냉전적 상황하의 국가 관계와 국익(national interest)을 위한 관계 구조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단절적이던 과거 냉전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극화된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현재의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현재는 과거에 비해 더욱 다극화된 시대이며 동시에 냉전시대의 경제적 단절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동일한 경제체제 내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많다(류동원 2022, 338).²⁾ 이처럼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더라도 냉전시대와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냉전과 신냉전의 비교

	냉전	신냉전
강대국 경쟁	미국 vs. 소련	미국 vs. 중국(+러시아)
이념 대결	자유주의(자본주의) vs. 공산주의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경제 관계	상호 단절	상호 연계
대리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우크라이나전쟁

출처: 장시영·남궁영(2023, p.7 표1)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이념 경쟁이 주로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냉전기와 달리 현재는 정치체제,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립과 경쟁은 경제적으로 상호 연계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잠시 축소되었던 양국 간의 무역량은 계속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역대 최대인 6,9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전 최대이던 2018년의 무역 총액을 넘어섰다.³⁾ 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미중갈등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나, 또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힘 또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는데, 1990년 미국의 GDP는 세계

2)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 글의 주된 논점이 아니므로, 이를 둘러싼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07/us-china-trade-climbs-to-record-in-2022-despite-efforts-to-split#xj4y7vzkg](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07/us-china-trade-climbs-to-record-in-2022-despite-efforts-to-split) (검색일: 2023년 7월 20일).

전체 총액 중 26.18%를 차지했으며, 2위 일본이 13.75%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 1위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93%로 하락한 반면, 2위 중국은 18.45%를 차지하여 미국과 2위국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장시영·남궁영 2023, 10). 한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2019년 봄에 3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29%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였다. 또한 미국에 대해 우호적(favorable)이라고 답한 비율이 54%로 과반을 넘긴 했지만, 우호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도 38%에 달했다.⁴⁾ 이러한 수치들은 패권국(hegemon) 또는 주도국(leading country)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미국에 대한 신뢰와 선호의 약화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한 과거 미국과 소련의 극한적 대립과 달리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중경쟁이 더욱 격화되기도 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양국 간의 충돌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와 협력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상당하다(김예경 2022, 3). 최근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 배제를 의미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논의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협 회피, 위협 억제를 의미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 또는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군사, 안보, 경제, 이념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물론 기후변화, 한반도 비핵화 등의 영역에서 양국이 이익을 공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김예경 2022, 11). 따라서 현 국제질서를 냉전기와 같은 단순한 대결적 상황으로 판단하여 특정 진영에만 엮매이는 것은 바람직한 외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하고 가치 공유를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겉으로 내세웠던 가치규범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김현준 2022, 8).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 기반 질서나 가치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국익이 더욱 강조되고 자국 중심성이 강조되는 시기일수록 국제사회 속의 갈등과 협력이 더욱 다층적이고 복잡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 및 한국이 모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중추국가(pivot state)란 다수의 강대국들이 원하는 군사적, 경제적, 이념적(ideational) 차원의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⁵⁾ 동아시아 지역의 미중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 또한 중추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4)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1/08/trump-ratings-remain-low-around-globe-while-views-of-u-s-stay-mostly-favorable/>
(검색일: 2023년 7월 12일).

할 수 있는 여지를 창출할 수 있지만,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김예경 2022, 6).

3.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한국의 공공외교

1) 제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의 비교평가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2017년에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공외교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2022년에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는 4개 목표 아래의 추진전략에서 공공외교를 세부적으로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의 세 분야로 구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2>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속의 추진전략으로서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 확산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 제고 •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주요국 대상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정책 공공외교 외연 확대 • 국내 외국인 대상 정책공공외교 활동 강화

출처: 외교부(2017)

이러한 분류는 2016년 공공외교법 통과 직후의 초기 단계에 공공외교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개념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외교의 자원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⁶⁾ 지식 공공외교의 내용으로 한국의 발전된 과학과 기술, 제도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식(knowledge)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내용으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즉 지식 공공외교의 내용을 한국학과 같이 한국에 관한 지식으로만 제한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정책공공외교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규범적 측면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제2차

5)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research/research-projects/governance-and-global-affairs/the-development-of-the-pivot-state-concept-based-on-mackinders-heartland-theory> (검색일: 2023년 7월 13일).

6) 김상배의 경우 ‘매력’론의 관점에서 6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김상배 2019, 34-43).

한 의식 / 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에서 보완되었는데, 제1차, 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비교해보면 2차 기본계획에서 지식 공공외교의 영역이 한국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등으로 확대되었고,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내용으로 가치와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제1차, 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비전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목표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제제고 및 국가 이미지 강화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전략 환경 조성 •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업체계 정착	•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 과학기술·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출처: 외교부(2017, 2022a)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3개 목표를 토대로 각각 4개씩 12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 ‘과학기술·혁신 등 우리 기술·제도의 국제적 공유’ 등이 중점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즉 정책공공외교의 중요 요소로서 가치와 규범, 지식공공외교의 요소로서 과학기술과 제도 등을 통한 기여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교부 자체적으로도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대해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자유

<표 4>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목표와 중점과제

목표	1.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증진	2. 과학기술·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3.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중점과제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지지 확대 • 중점협력국가 및 지역 대상 정책 소통 강화 •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 • 해외 차세대와 열린 교류를 통한 미래 협력 기반 공고화	• 과학기술·혁신 등 우리 기술·제도의 국제적 공유 • 한국어·한국학에 대한 글로벌 저변 확대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 쌍방향 문화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지지 확산	•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 우리 청년의 공공외교 역량제고와 해외진출 지원 • 지자체 및 재외동포, 기업 등 민관 협업 제고 • 범정부·통합적 공공외교 추진체계 강화

출처: 외교부(2022, 8)

민주주의·평화·인권·환경 등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과학기술·혁신제도 공유 등 지식 공공외교의 범주 확대가 특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외교부 2022b, 1)

하지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공공외교를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문화공공외교 보다는 정책에 집중된 단기적 성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식공공외교와 문화공공외교를 하나의 목표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외교 하위 분야의 구체화를 통한 기획과 집행 효율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중추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공공외교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⁷⁾ 이러한 변화는 성과를 가시화하여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공공외교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연관된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 보다는, 단기적인 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는 정책공공외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공공외교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해 범정부적 공공외교 정책 수립과 집행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과 공공외교 수행 주체 및 분야별 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범정부 조정과 협업체계를 통한 사업 효율성,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외교부 2022a, 2-4). 특히 지역별, 영역별 사업의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1차 기본계획이 문화외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외교부 2022a, 5).

<표 5> 공공외교 분야별 사업 비중 추이(%)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공공외교	56.6	39.3	40.7	40.2	40.4
지식공공외교	34.1	28.3	24.7	26.7	27.7
정책공공외교	9.3	32.4	34.6	33.1	31.8

출처: 외교부(2022a, 3)

하지만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영역별 사업의 편중 문제는 공공외교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문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국익의 관점에서 지역별 편중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공공외교가 미국을 중시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공공외교가 국익과 더욱 밀접한 미국, 중국 또는 일본에 편중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

7) 문화, 지식, 정책공공외교의 구분이 모호하며 장기적 문화공공외교와 단기적 정책공공외교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백우열 2017).

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공공외교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다. 2016년 제정된 공공외교법의 제3조 3항에 규정된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지역 편중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신진 2017).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의 비중에 대한 논의는 더욱 논쟁적일 수 있다. 장기적인 문화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가 공공외교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 단기적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추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공외교는 정무외교와 유사한 것으로 ‘통일공공외교’와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대상 국가의 정책 엘리트에 집중하게 된다(백우열 2017, 11-12).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 정의나 공공외교를 바라보는 관점, 공공외교를 통해 추구하는 국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공외교가 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공외교의 분야별 사업(예산)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외교의 유형과 사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지 문화공공외교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를 특정 분야에 대한 편중이라고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정책공공외교와 글로벌 가치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는 정책공공외교(목표1)의 중점 과제로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가 명시되어 있다(표 4 참고). 이는 이른바 가치외교를 강조하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치와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공외교의 기존의 이론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조셉 나이는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핵심 요소로 문화, 정치적 가치, 정책을 꼽았다(Nye 2004, 256).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치적 가치가 주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이다. 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치와 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김태환은 공공외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국가와 공동체의 본원적 특성을 반영하며 안보 및 경제이익과 관련된 ‘투사형 공공외교’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로서 가치 및 규범적 이익과 관련된 ‘주창형 공공외교’를 제시하면서, 주창형 공공외교와 가치외교의 부상을 강조하고 있다(2019, 7-9). 여기서 가치외교란 “특정 가치를 외교정책에 반영하여 이를 국제사회에서 증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외교”를 의미한다(김태환 2019, 9-10). 최근 미국과 일본이 강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우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하는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를 강조하면서 구성요소로 자유, 법치, 주권존중, 시장경제 등을 내세웠다(정구연 외 2018, 14-15).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가치외교를 강조했는데, 1차 아베 내각 당시 외무대신을 역임한 아소 다로(麻生太郎)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강조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지역협력 개념을 제기하기도 했다.⁸⁾ 다만 이러한 협력 개념은 전지구적이라기 보다는 특정 국가들을 배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러시아나 중국은 반(反)자유주의, 반패권주의를 강조하는 권위주의 국가로서 미국이나 일본이 강조하는 가치외교가 이들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의 진영화’ 현상이 강화되었고(김태환 2019), 신냉전적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공공외교의 중점과제로 제시된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국제사회 평화, 인권, 자유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둘째,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기여국 이미지 제고, 셋째,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리더십 인식이라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외교부 2022a, 14-16). 이 중 가치외교와 더욱 밀접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한반도 평화를 넘어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소개, ②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 근절에 관한 우리 입장 지지 확대 및 성평등 관련 국제 논의 진전에 기여 확대, ③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통한 국제협력 및 연대 강화, ④ 유엔 등 다자협력체를 통한 글로벌 가치 기여 이미지 제고, ⑤ 홍익인간 등 한국의 가치에 기반한 공공외교 활동 확대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치와 규범을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선도하는 것이 정책공공외교의 핵심적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김태환 2021. 23), 글로벌 가치 실현을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치(규범) 공공외교의 내용에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다. 먼저 평화에 대한 기여의 내용으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UN에서 제시된 보편성을 지닌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인간안보가 1990년 후반 이래로 일본이 주도하는 가치외교(정책공공외교)의 핵심 주제라는 점에서 좀 더 새로운 또는 좀 더 세분화된 우리만의 개념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평가할 수 있다.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 문제의 경우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이 중시되고 있는 현 정부 하에서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전시 성폭력 근절은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한일관계 중심의 제한된 쟁점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한국의 가치에 기반한 공공외교 활동 확대’에 관한 부분이다. 세부 내용으로 “홍익인간, 공동체 의식, 공화국 정신 등 한국의 가치를 국제사회 내 담론과 연결하여...”라고(외교부 2022a, 15) 기술하고 있는데 ‘홍익인간’ 정신이 국제사회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제시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호하다. 또한 ‘공화국 정신’이 한국의 가치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추상적이지만 공화국 정신이 한국의 가치라는 주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공공외교의 내용으로 가치와 규범을 중요하게 다

8) https://www.mofa.go.jp/mofaj/press/enzetsu/18/easo_1130.html (검색일: 2023년 7월 20일).

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성에 맞는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2차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에 대한 기여가 정책공공외교 차원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4. 대립하는 시대 속의 한국 공공외교

1) 다층적·복합적 갈등과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

신냉전 시대의 갈등과 협력은 과거 냉전시대와는 다른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양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훨씬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들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진영의 편에 선 가치와 규범의 추구가 외교적 위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보편성을 가장한 공격적인 방식의 가치외교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가별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자유나 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더라도 여전히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권위주의의 국가, 반자유주의적 국가와 같이 공통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국제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반자유주의적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중요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주창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이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이 중시한 가치를 진보정부의 경우 ‘평화’로, 보수정부의 경우 ‘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김태환 2021, 7). 그렇다면 한국의 정책공공외교에서 두 가지 가치가 모두 강조되어야 하는지, 또는 두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올바른 가치와 규범은 권위와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김태환은 공공외교가 단지 자국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국제적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공공외교의 핵심영역으로 가치와 규범의 배분을 강조하고 있다(김태환 2021, 23). 즉 국가의 정체성으로서의 특정한 가치와 규범이 상대국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지만, ‘평화’와 같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신뢰받는 국가, 존경받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권에 따라 강조하는 가치가 달라지면서 정책공공외교의 내용이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일관성과 지속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

다(김태환 2023, 46).

가치외교, 정책공공외교의 관점에서 2000년대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인간안보)’를 제시한 이후, 일본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빈곤과 기아, 보건 및 의료, 교육 분야의 기여에 관심을 두었으며 인간안보를 일본 외교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류시현 2015, 43). 일본 정부는 1999년 유엔에 ‘인간안보기금’으로 5억엔을 제공한 이후 인간안보의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2006년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을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아베 총리가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positive pacifism)’ 또한 보편적 가치를 수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제시한 ‘적극적 평화’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인간안보와 적극적 평화주의의 배경에 일본의 국익을 위한 의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0년대 일본의 문화외교(공공외교)의 특징들은 한국의 공공외교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김필동 2014, 574-578). 일본은 다자주의 틀 속에서 문화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공공외교를 기획하는 동시에 주요 국가(미국, 중국, 한국 등)와의 교류를 전략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방, 지자체, NGO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여 인적교류는 물론 제도나 가치관을 이입하도록 노력했다. 일본 사례로부터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정책 수립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평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2) 글로벌 보편가치의 추구와 수행 주체의 다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평화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요한 가치로 제시한 바가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두 개념이 별개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양자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개인, 사회, 국가라는 세 차원에서의 평화(인권 및 존엄성, 안전, 공존과 전쟁부재)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개인의 자유와 인권, 법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활용한 보편적 규범공공외교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식민지 및 한국 전쟁, 남북분단, 산업화와 경제성장, 민주화의 역사적 경험은 전쟁범죄의 해악, 평화와 안전, 교육,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을 알려주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책공공외교란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⁹⁾,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변4강국들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단기적 정책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9)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www/wpge/m_22709/contents.do). (검색일: 2023년 7월 10일).

내용이 될 것이며 평화와 자유민주적 가치 추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서 외교적 정당성과 당위성의 바탕이 될 것이다. 보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제기구를 통해 제시된 가치와 연계하고 근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동의와 지지를 획득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의 각 조항들로부터 한국의 정체성과 합치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기본방향으로 전략적 정책공공외교의 강화를 강조하며, “글로벌 가치, 규범을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공공외교 필요”라고 기술하고 있다(외교부 2022, 7). 최근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같이 글로벌 가치와 규범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다. 정책공공외교의 내용으로서 ‘글로벌 보편가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가치의 진영화에 따른 대립과 신냉전적 진영화가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와 점점 소원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문화공공외교와 상호 이익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식공공외교는 동질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재외동포, 기업과의 민관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지자체 및 NGO, 기업 등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처럼 외교관계가 경직되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교류와 문화교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관계의 악화를 예방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공공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 NGO, 기업 중심의 교류와 공공외교 활동이 관계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전략은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중갈등과 신냉전으로도 불리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현재의 상황이 다층적이고 복잡적이며 가변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제1차 공공외교에서 부족했던 지식공공외교와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내용들을 추가하여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첨단 산업기술 및 보건의료, 민주주의 등 지식공공외교의 범위의 확장을 명시한 점과 정책공공외교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잘 제시한 것이다. 또한 수단으로

서의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한 강조도 미래지향적인 공공외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 보편적 가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련된 개념이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가치외교’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대결을 염두에 둔 특정한 것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글로벌 보편가치’로서 정책공공외교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외교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나이(Nye)는 소프트 파워 강국의 조건으로 문화, 정치적 가치, 정책을 꼽았다. 김상배는 소프트 파워와 관련하여 ‘매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매력의 요건으로 하드파워(군사력, 경제력), 국가브랜드, 문화, 제도, 가치와 규범, 네트워크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김상배 2019, 34-43). 이들의 의견을 재구성하여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이 추구해야 할 공공외교의 미래로 문화강국(전통·대중문화), 규범(가치)강국, 네트워크 강국이라는 세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는 K-pop, K-culture의 확산이라는 현재의 우호적 상황 속에서 특수성에 기초한 매력과 보편성을 통한 확장성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역사적 경험 속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발신하여 규범(가치)강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라는 현실적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지식·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 가치와 규범을 통한 정책공공외교가 있다.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실현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의 미래에 더욱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 김상배 (2019). 제1장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외, <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예경 (202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 쟁점과 접점. <한국과 국제정치>, 38권 2호, 1-30.
- 김태효 (2021).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新亞細亞>, 28권 2호, 113-126.
- 김태환 (2019).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와 정치>, 6권 1호, 5-32.
- ____ (2021).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진화와 방향성: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의 시각.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1권 1호, 1-28.
- ____ (2023). 한국 공공외교의 유형 분석과 방향성 2018~2022: 자국 중심성을 넘어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2-07>.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한익석 / 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 김필동 (2014). <전후 일본의 문화외교 연구>. 소명출판.
- 김현준 (2022). 가치와 규범 외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중 격돌 속 한국 외교.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 7>. 동아시아연구원.
- 류동원 (2022). 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中國地域研究>, 9권 2호, 333-362.
- 류시현 (2015). 일본의 ODA 정책과 인간안보: 일본 국내담론과 국제규범 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1호, 33-52.
- 백우열 (2017). 한국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기초적 유형의 개념화. <국가전략>, 23권 3호, 5-32.
- 신진 (2017). 공공외교의 한·미간 비교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4집 1호, pp. 1-26.
- 외교부 (2017).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2021]>. 2017년 8월.
- 외교부 (2022a).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2023-2027]>. 2022년 8월.
- 외교부 (2022b). <2023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개요>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6/contents.do)
- 오승희 · 박창건 (2020). 미·중 이중적 위계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국방연구>, 63권 3호, 29-54.
- 장시영 · 남궁영 (2023). 도전받는 미국의 헤게모니: 중·러의 도전과 진영 형성에 따른 신냉전 가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41집 10호, 1-53.
- 정구연 · 이재현 · 백우열 · 이기태 (2018).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23권 2호, 5-40.

Nye, Joseph S. Jr. (2004). Soft Pow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2), 255-270.

Abstract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An Evaluation of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2023-2027)**

Euisuok Han^{*}

(Associate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me observers call current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new Cold War.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ld War are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the Cold War. Under this conditio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in 2022. Compared with the 1st Basic Plan, the 2nd plan shows several progress such as expansion of items for knowledge (public) diplomacy and inclusion of global value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e 2nd plan also emphasizes digital public diplomacy as a tool for enhancing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Despite substantial progress, the plan does not suggest definite and reliable global values as a part of Korean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ortant points to develop Korea'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Keywords: new Cold War,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Value-oriented Diplomacy, Public Diplomacy for Policy, Global(Universal) Value

투고일: 2023. 07. 31.
최종심사일: 2023. 08. 27.
게재확정일: 2023. 08. 27.

* eshan@sungshin.ac.kr